Eastern Illinois University

From the SelectedWorks of Jinhee Lee

May, 2015

간토대학살에 비쳐본 일본 제국의 어제와 오늘 : 92년 만에 확인된 한인 희생자의 두 개의 묘 (The Past and Present of the Japanese Empire: Thinking through the Recent Discovery of Two Coexisting Tombs of a Kanto Massacre Victim)

Jinhee Lee, *Eastern Illinois University*

Available at: https://works.bepress.com/jinhee_lee/51/

2015년 5월호(통권 98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문제

2015. 5. 25

1. 군산도의 왕릉과 숭산행궁, 청자운반선

곽 장 근 (군산대학교)

군산도(群山島)는 후백제와 오월, 고려와 남송 사이의 해상교역의 거점이자 국제외교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특히 송의 사신 서긍일행 등이 이 곳을 거쳐 개경에 들어왔고, 김부식도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이 숭산행궁을 찾은 바 있다. 몽골 침략시 피난민의 집결지와 대몽항쟁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던 군산도는 여말 왜구의 약탈과 조선의 해금정책 등으로 쇠퇴기를 맞게 된다. 최근 관련 유물이 출토되면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번성했던 해양문화의 진면목을 보존,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송나라 국신사 파견과 김부식의 영접
Ⅲ. 군산도의 왕릉 및 청자운반선의 보고
Ⅳ. 나오는 글

2. 간토대학살에 비쳐본 일본 제국의 어제와 오늘
– 92년 만에 확인된 한인 희생자의 두 개의 묘 –

이 진 희 (미 이스턴일리노이대 사학과)

1923년 일본 칸토지역에 발생한 대지진의 혼란 속에 일본 군경과 자경단이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을 마녀사냥식으로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냉전적 구도에서 '은폐'되었던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의 관심과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글은 피살자 강대흥의 경우를 중심으로 양식있는 일본의 학자와, 시민과 굴절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과 행태를 대조하며 탈냉전, 탈식민시대의 역사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Ⅰ. "전후일본"이라는 개념의 실효성
Ⅱ. 간토 대학살과 한인 피살자의 묘
Ⅲ. 피살자 강대흥의 또 하나의 묘
Ⅳ. 두개의 묘가 있기까지
Ⅴ. 탈식민· 탈냉전 시대의 역사인식과 제국의 폭력 청산을 위한 연대화 협력

3. 한반도 소재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현황과 활용방안

정 혜 경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된 조선인 관련 유적은 최소 12,831개소로, 한반도에만도 8,434개 소에 달하고 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전쟁고고학'(또는 戰跡고고학)을 주장하며 이들 시설을 보존·활용하며 역사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많은 관련 유적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회피와 관심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한일 양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역사를 성찰하는 장으로써 이들 유적과 관련한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Ⅰ. 한반도 소재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현황
Ⅱ.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의 활용 현황 – 일본, 한국 –
Ⅲ. 한반도 소재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의 활용 방안

간토대학살에 비쳐본 일본 제국의 어제와 오늘

– 92년 만에 확인된 한인 희생자의 두 개의 묘 –

이진희 (미 이스턴일리노이대 사학과 교수)

7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고, 일본의 패전은 전쟁과 억압에 지친 식민지와 "황국 신민"의 해방, 곧 일본 제국의 해체를 의미했다. 그러나 1945년 열한살 어린이로 홋카이도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김외한 할머니는 그후 70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죄와 보상을 받기는 커녕 이미 드러난 공권력에 의한 일본제국의 범죄 사실조차 부정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돌아가셔야 했다. 임종에 앞서 김 할머니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많은 도움을 주신 사회에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한다. 올 6월 한달 동안만도 김 할머니와 같이 생존해 계셨던 "위안부" 피해자 중 세 분이나 청산되지 못한 일본 제국주의가 할퀸 육체적·정신적 고통 가운데 타계하셨다.[1] 최근 한일 관계를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이슈, 일본 근대 산업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논란에 있어서도 신청 건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WHC)의 최종 결정 순간까지도 아소 탄광을 비롯한 해당 산업 시설에서 자행된 수만명의 노예 노동자(slave laborers)와 연합군 전쟁포로에 대한 일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침묵한 채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한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국내외로 쏟아져 나왔다.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의 산업 시설 중 다수가 강제 징용의 장소로서 수많은 한인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한 시설들이었다. 이같은 돌아보지 않으면 안될 시설들에 얽힌 일본 제국의 역사상은 배제한 채 세계 인류의 유산으로서 기념하기를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자세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 원칙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양도 불가한 기본권을 중시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로 결의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정신과도 모순되는 것이다.[2] 일본제국이 패망하고 한국이 나라를 찾은지 70년,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회복한지 50년 후의 일이다. 이러

1) "일본 위안부 피해자 김외한 할머니 별세… 생존자 51명", "같은 날 위안부 피해자 2명 별세… 50명만 생존",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 별세… 생존자 49명만 남아" 『연합뉴스』 2015년 6월 11일, 12일, 25일자.

2) "미 하원 연명서한 '전쟁포로 반영 안된 日세계유산 등재 반대'" 『연합뉴스』 2015년 7월 4일.

한 걷힐 줄 모르는 제국의 그림자를 반추해 볼 때, 오늘날 과연 일본 제국은 해체되었고 우리는 식민 지배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일까?

Ⅰ. “전후일본” 이라는 개념의 실효성

종전 직후 1945년 가을의 제국의회를 시작으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전후 처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승자 연합군에 의한 불완전한 전쟁 범죄 재판과 병행해 일본의 스스로의 손으로 전쟁 책임을 검증하겠다며 설치한 “대동아전쟁조사회”는 결국 “국민의 반성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각의 결정으로 빼버린 채, 전쟁의 책임이나 근본 원인이 아닌 패전의 경과를 조사한다는 식으로 귀착되고 말았다.[3] 팽창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로 무장하고 전쟁과 침략을 통해 열강의 반열에 오르고자 했던 메이지 시대(1868-1912)의 정신을 계승하기라도 하듯, 패전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일본의 많은 중심 지도자들은 “식민지 시혜론”과 “근대화 공헌론”에의 신봉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 등에 힘입어 1950년대 중반에는 이미 정부의 경제백서를 통해 “もはや「戦後」ではない”, 즉 “이제 「전후」가 아니다”고 하면서 더이상 전쟁의 폐허를 헤쳐나가야 하는 “전후”의 상황을 넘어섰음을 선언하리만큼 성공적 경제회복을 이끌어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냉전의 세계 질서 하에 반공 경제대국으로 재편된 전후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배의 폐해를 눈앞에 두고도 메이지 시대 이래 추구해온 부국강병, 산업화, 근대화 지상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눈부신 전후의 경제 성장을 등에 업고 식민지주의와 일본 제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때로는 향수어린 동경마저 간직한 채 식민지배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불식시키지 못해왔다. 그 결과, 한일 예비회담과 기본조약 협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1970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본 제국의 아시아 근대화에의 “공헌”이라는 발상을 전후 일본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은 채 아시아 각국과의 배상 및 보상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즉 전후의 경제 “복구” 수준을 넘어서 경제 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협정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국의 전쟁책임에 대한 “법적 해결”을 “완료”하고자 했던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역사교과서 문제나 정치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3) 波多野澄夫, 「서문」『国家と歴史』中公新書, 2011.

등의 사건을 통해 근대 일본의 “과거”를 둘러싼 이웃국들과의 논란이 빈번해졌으나 여전히 철저히 검증도, 설명도, 성찰도 되지 않은 일본 제국의 폭력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요원한 상태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웃국들과 관련된 역사 교과서 부분의 기술에 있어서는 “국제 이해와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근린제국조항” (1982)을 일본 정부는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쟁과 식민 지배의 현실에서 나타난 야만성을 직시 대면하는 성찰의 결과가 아닌, 일본국의 “명예로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시혜적이고 얄팍한 “배려”의 시도로 제국의 폭력에 뿌리를 둔 주변국들과의 “과거사”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즉 일본 제국과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의미에 대한 내재적 의식상의 혼란이 안으로 밖으로 돌출되면서 급기야 외교문제로까지 불거지게 된 꼴이고, 이러한 식민주의와 침략 전쟁의 잔재는 떨쳐버리고 싶은 쇠사슬과 같은 “전후”의 불안정한 상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떨쳐버릴 수 없어, 전전/전중/전후 그리고 또 전후라는 “전후 일본”의 연속 가운데 1990년대를 맞게한 것이었다.

이제 쇼와천황도, 베를린 장벽도, 구소련도 사라졌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생해 세계 최강의 군사경제대국인 미국의 조력자로서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제1세계(The First World)의 준멤버라는 냉전시대 일본의 위상은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55년 자민당 체제가 흔들리고 일본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사그러져 갔으며, (반)식민지 또는 위성국의 입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제3세계의 경쟁력과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배타적 세계 질서의 주도권은 흔들리고 다중심 질서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탈냉전 시대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들어섰다고는 해도, 일본은 여전히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으로 군사력이나 정치외교상의 온전한 독립이 불가능한 냉전 구도의 사슬에 묶인 채, 국력 성장에 힘입은 탈식민지적 정체성 확립 노정에 선 주변국들로부터 제기되는 과거 일본제국의 폭력에 대한 고발은 강도를 더해가기만 한다. 그간 냉전이라는 보호막에 감추고 묻고 넘어갈 수 있었던 강제노동, 성노예제도, 식민지 대량학살, 대량살상 화학무기를 비롯한 각종 비인도적 집단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사죄와 배상이 아닌 “경제원조”나 “근린제국조항” 등의 편법으로 아시아의 구성원들과 화합을 시도했던 전후 일본의 전략은 탈냉전 · 탈식민지 시

대를 맞이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명예로운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본적인 신뢰조차도 얻지 못한 상태를 인지하고 전후 처리에 종지부를 찍고자 시도한 "항구평화조사회설치"와 같은 초당적 법안(1999)이라는 것도 마련코자 해봤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널리 공유할만한 원폭과 패전에 다다르기까지의 제국과 전쟁이 갖는 기본적 의미 자체에 대한 전반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혼란스런 "전후일본"의 국내 상황의 맥락 속에서는 불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처리"되지 않은 "전후시대"는 일본의 과거가 아닌 바로 현재이고 미래가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청산되지 못하고 탈냉전·탈식민시대로까지 연장되어온 이 "전후일본"이라는 시대착오적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무엇이 넘어서지 못하는 냉전적, 식민지주의적 역사 인식을 지속시키고 있는가? 오늘날 불거져 나오는 근대 제국의 폭력에 대한 검증 요구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오늘날[4] 어떤 식으로 구태연하게, 그러나 강도와 나름의 "논리"를 더하여 이처럼 식민주의 범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구시대적 역사인식과 수정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는가?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식민지주의와 냉전주의 영향하에 성립되고 유지되어온 전후일본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필자가 오랜기간 연구해온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전의 "평화"시기에 감행된 일본 제국의 무차별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인 간토대학살 (1923)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과거가 한인과 일본인 간 상호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증거 소멸이 불가능한 제국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조차 거듭되어온 역사적 사실 부정과 왜곡을 둘러싼 이웃국들과의 갈등의 악순환, 또 이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국내외의 동력을 어떻게하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 방향과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간토대학살과 한인 피살자의 묘

필자가 일본 제국의 심장 도쿄·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간토지방에서 발생한 1923년 9월의 대규모 한인 학살 사건[5]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는 15년쯤 전 요코하마에 장기 체류하며 읽기 시작한 향토 사료들과의 만남이었다. 흥미롭게도 일본 제국의 행정·입법·사법부서의 '공식'문서에 등장하는 한인 학살 사건은 모순 그 자체였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었

4) 永原陽子, 「戦後日本の戦後責任: 植民地ジェノサイドをめぐる論争を手がかりに」 『歴史学研究』 921 (2014. 8), 1-22.

5) 한국에서 "관동대지진"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관동 (간토)" 지방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포함한 일본 동부 지방을 일컫는 말로,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군마(群馬)현, 도치기(栃木)현, 이바라키(茨城)현에 이르는 간토(関東) 일대를 가리킨다. 1923년의 지진 및 그에 따른 화재 등으로 십만명을 웃도는 사망자를 낳은 전체적 재해상을 통괄하여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간토다이신사이"(関東大震災)로 부른다. 본고에서는 서명이나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 지방 이름의 발음을 살려 "간토대지진"으로, 또 재해 직후 반한 (反韓) 유언비어와 더불어 발생한 일본 관민에 의한 대규모 한인 학살 사건을 "간토대학살"로 일괄 표기하기로 한다

다고는 하나 전쟁범죄도 아닌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일컫는 민주화의 물결이 일던 시기에 제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세계사적 규모의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살의 주체, 피해자 수와 이름, 사체 처리, 사건의 종결 방식,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어 있지 않았다. 70년이 넘도록 묻혀지고 덮여진 학살의 진상에 대한 진실의 실마리가 일본의 아카이브 안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열심히 자료를 모았다. 이러한 사료 조사 경험을 통해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은 제국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영향하에 구성·보존되어온 문서 사료에 존재하는 행간과 공백을 치밀하고 복안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석 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이었다. 즉, 제국의 유물로 구성된 식민사료관을 창의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통한 탈식민적 방법론을 통해 기존 제국 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건을 재구성 해가야 하며, 동시에 냉전시대라는 특수막을 통해 소멸 또는 유지되어온 제국 시기의 기존 문서들의 한계를 간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탈냉전적 관점에서 새로이 자료를 발굴하고 총체적으로 해석해 식민지기의 역사상을 실증하고 이해해 가야 한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다.

몇 해 후 도쿄대학교 한국조선문화연구실 체재 중, 2·8 독립선언의 시발점 등으로 유서깊은 도쿄 스이도바시 근교 재일본 한국YMCA회관에서 간토대학살에 대해 수십년간 연구해온 일본인 연구자 야마다 쇼지 선생을 뵙게되었다. 그는 일제와 국가 권력 하에서 행해진 종군위안부, 강제 연행, 나병 환자 강제 수용 문제, 정치'범'에 관한 연구 등, 직시하지 않으면 아니될 근대일본사의 부끄러운 과거를 검증 분석해온 연구자이다. 선생은 일본 각지에 보존되고 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선인학살 피해자의 추도비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초엽, 그러니까 1980년대 초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 사이타마시 소메야(さいたま市 染谷)의 죠센지(常泉寺) 사원 내 묘지에 있는 강대흥(姜大興)의 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다. 강에게도 조선에 육친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고향 육친을 생각하며 어떠한 기분으로 죽어갔던 것일까. 또 고향에 계신 육친은 돌아오지 않는 그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 강은 어디로부터 이 소메야로 오게되었었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소메야 주민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그의 소지품에 이름이 적혀있었던지 이름만은 묘비에 새겨져있다. 그러나 소메야 사람들은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고향의 육친에게 전해졌을 리가 만무하다.
> 이 때 학살된 조선인 대부분은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필시 몇만명이나 되

는 조선의 육친들은 일본에 건너간 부모 형제가 귀국하기를 헛되게 기다리다가, 그들이 죽게된 장소조차 알 수 없는 그 슬픔과 원한을 안고서 긴긴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나는 강의 묘 앞에 섰을 때에서야 처음으로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게 있어서 이 묘비와 추도비를 찾아다니는 일은, 죽은 자와 그 유족이 가져야했던 아픔을 내 자신에게 새겨넣어가는 일종의 통로가 되었다.[6]

선생의 이러한 자성의 소리에 감동을 받았던 만큼 나를 괴롭힌 생각은 소메야의 지역민들을 비롯한 일본의 후예들에게는 미흡하나마 간토대학살 사건에 대해 돌아보고 아로새길 수 있는, 이제껏 알려진 것만도 수십 개에 달하는 한인 학살 사건 관련 묘비와 추도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7] 안타깝게도 식민주의 영향 아래 검열 배제되고 왜곡 미화된 채로 남겨져 있는 과거 식민지 관련 일본 내 문서 사료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어느 구석에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기만을 바라며 한인들 자신들에 의해 남겨진 이 1923년 대량 학살에 대한 흔적을 15년 이상 찾아 헤매온 필자는 이 사건의 희생자를 추도하는 시설이나 공공의 기억의 장소를 한국에서는 단 한군데도 찾지 못했다.[8]

당시 일본에 머물던 조선인들은 유학생을 제외하곤 대부분 제국의 언어를 알지 못했다. 1920년대 초 일본 내 한인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인데다가 작업 현장도 고립된 험지인 경우가 많아 피살자의 이름과 신상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화, 강간, 폭동, 약탈, 투독 등의 범죄 혐의를 쓰고 계엄령 아래 군대, 경찰, 민간 자경단에 의해 집단 학살을 당했던 배후에는 놀랄만큼 신속히 또 조직적으로 퍼져나간 유언비어의 영향이 컸다. 이는 피압박민인 한인들이 언제 어떻게 일본인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는 내재된 공포감, 죄책감, 긴장감이 당시의 식민 지배 구도 속 일본 제국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맞아 학살의 동력으로 전환되었던 것이었다. 강대흥과 같은 한인들이 어떤 계기로든 "후테이 센진" (不逞鮮人)으로 명명된 순간, 그는 이미 존엄한 한 인간이기보다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또는 그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제국의 적", "공공(公共)의 적"으로 기호화되어 "처분"해도 된다는 의식이 정부, 군대, 경찰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퍼져있게 된 것이었다.[9] 이같은 상황 속에 이뤄진 학살 행위 후 그 피해자에게 인격체로서 이름을 부여한다든지 표정이나 얼굴을 기록해 두었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10] 다행히도 피살자 강대흥은 사건 후 얼마 안된 시점에서

6) 야마다 쇼지, 이진희 역,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서울: 논형, 2008, 235-236.

7) 일본의 간토 지방 각지에 존재하는 간토 한인 학살과 관련한 현존 전전, 전후시대 세워진 추도비에 관한 소개는 위의 책 1장 참조.

8) 한국 내 간토대학살에 대한 심도있는 성찰과 기억의 노력은 오랜동안 빈약하다. 필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서의 번역본과 학술회의의 공동저술집을 제외한 간토대학살을다룬 한국 내 개인 연구자의 심도있는 단행본을 단 한권도 찾지 못했다. 부끄럽고 놀라운 사실이나, 필자의 Instability of Empire: Earthquake, Rumor, and the Massacre of Koreans in the Japanese Empir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4)는 현재까지 이 주제를 다룬 세계 최초 그리고 유일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노주은의 「관동대지진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진재처리'과정을 중심으로」는 필자가 아는 한 간토대학살에 대한 역사 검증을 시도한 국내 최초의 학위논문이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최근 이 주제에 관한 심도있는 한국 최초로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한 동북아역사재단은 발표된 귀한 연구들을『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사건』로 묶어내었다 (2014).

9) 일본제국에서의 "불령선인"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는 졸고 "'Malcontent Koreans (Futei Senjin)': Towards a Genealogy of Colonial Representation of Koreans in the Japanese Empire," Studies on Asia IV (3:1), 2013, 117-187 참조. 또한 필자는 간토대학살 당시 드러난 제국의 지배민과 피지배민이 동시에 겪어야했던 이러한 이중의 심층 불안 현상을 "식민 폭력 역류의 환영" ("imagined Inversion of colonial violence")이라 졸고 (2004) 제2장에서 명명한 바 있다.

지역민들에 의해 학살 장소 근처에 묘비가 세워져 이름도 새겨지고 9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가 살해된 매년 9월 4일이면 이 곳에서 추도도 행해진다.[11] 하지만 그의 경우도 그가 그리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을 그의 조국에는 그가 폭도로 몰려 타지에서 한밤중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학살 사실의 진상을 규명해줄, 또 그를 애타게 찾았을 육친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이가 없었다. 그의 조국은 나라를 되찾았고 이제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건만 대한민국은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도 그의 유골을 찾지도 않았다. 그의 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타마의 후예들에 의해 때로는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지켜왔던 것이다. 학살 후 92년이 지난 오늘, 과연 강대흥에게 조국은 있는가?

나라를 빼앗기고 소작지를 빼앗겨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까지 건너가 노동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결국 유언비어의 대상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만 수천의 조선인. 그러나 학살의 사실 조차 감추어진 채 다시 한번 인식상의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 그렇게 억눌려 살아가던 피식민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국가와 더불어 집단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일본인을 만들고 만 일본 제국의 현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 다난한 순간 순간의 개개인의 선택과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 참으로 일본에서 20세기 초를 살아낸 이들의 삶에 배어있는 “국경”, 민족, 언어의 벽을 넘나든 이들의 근대 제국의 경험은, 이제껏 축적된 한국사 일본사 속에서도, 그리고 세계사의 관점에서 본 근대 제국주의와 식민지 대량학살의 연구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외면되어온 가깝지만 요원했던 바로 우리의 과거이다. 이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식민지주의와 냉전의 구도 하에 오랫동안 감춰져있던 한일 근대사의 모습은 제국의 “과거”와 비인도적 폭력을 둘러싼 검증과 기억의 공방이 더더욱 거세어지는 오늘날 우리가 꼭 되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제부터 우리가 재구성하고 재해석해가야 할 일본 제국과 대일항쟁기의 총체적 역사상을 밝혀가기 위한 하나의 기점이다.

10) 사아타마현 오사토군 요리이의 엿장수로 행상을 하며 몇몇의 일본인과 친분이 있던 구학영(김창)과 같은 소수의 학살 희생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수많은 학살 관련 증언, 일기, 회고담, 묘비, 관련 문서 등에 등장하는 조선인들에게는 대부분 이름이 기록되어있지 않다. 이는 유족찾기와 진상 규명을 위한 희생자의 신원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한 흥미롭게도 유사한 현상이 그림과 같은 학살에 대한 비문서 기록에 있어서도 얼굴의 눈, 코, 입이 생략되거나 개개인의 표정 등이 드러나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림에 의해 기록된 간토대학살과 관련해서는 新井勝紘「”描かれた朝鮮人虐殺論”その二—関東大震災８０年をむかえて」『隣人』17, 2003; 졸고, The Massacre of Koreans through Paintings (The Great Kanto Earthquake 8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Booklet), Tokyo: Koryŏ Museum, 2003 참조.

11) 강대흥 학살 사건에 관한 연구는 사이타마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현해탄 양측 간 평화와 우호를 목표로 만들어진 일본인 시민단체인 일조협회와 함께 40년 이상 행해져왔다. 関東大震災六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実行委員会 編刊『かくされていた歴史—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増補保存版, 1987, 61; 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虐殺犠牲者調査追悼実行委員会 編刊『かくされていた歴史—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1974.



92년전 가타야나기 마을 주민들에게 학살당한 “조선인 강대흥 묘”(常泉寺墓地)
〈사진: 오충공〉

Ⅲ. 피살자 강대흥의 또 하나의 묘

강대흥(학살 당시 24세)은 지진과 조선인 폭동 등의 유언비어가 발생한 후 사이타마현 경찰이 현내 조선인을 모아 이웃 지역인 군마현 등지로 이송하려던 과정에서 가타야나기무라(片柳村, 현 埼玉市) 소메야에 오게 되었고, 1923년 9월 4일 새벽녘 이 지역 주민에게 학살당했다 한다. 당시 사이타마현에서는 고사카 내무부장의 지령에 의해 “불령한 무리”의 공격에 대비해 자경단이 결성되었는데, 가타야나기 마을에서는 자경단 결성 다음날인 4일 오전 2시경 마을 주민들이 강대흥을 타살했다고 기록되어있다.[12] 게다가 학살 후 마을 사람들은 오미야(大宮) 경찰서에 출두해 계엄령 아래 행해진 일이었던만큼 관헌을 도와 조선인을 잡으면 무공 훈장[13]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중 두명은 실제로 “악한을 잡아 못된 짓을 못하게 막았으니, 꼭 상을 받고싶다”고 자청하고 나섰다고 한다.[14] 이 지역주민이던 고이즈미 사쿠지로(小泉作次郎)의 회고에 의하면 학살 “사건 관계자가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를 동정하는 마음에서” 그해 사건 후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묘를 썼고,[15]2001년에는 새 묘비도 추가로 만들어졌다.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9월 4일에는 매년 40-50명이 모여 추도식도 열고 있다.

1923년 9월 1일 토요일 점심 준비 시간을 즈음해 대지진이 발생한 후 강한 바람과 대형 화재로 진원지에 가까운 도쿄, 요코하마를 비롯한 간토지방에서는 10만명에 육박하는 인명피해를 낳았다. 흉흉해진 민심을 잡고 위

12) 関東大震災六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実行委員会, 1987, 61;
13) 금빛소리개(金鳶) 무공 훈장은 일본의 뛰어난 군인에게 하사했던 훈장. 진무(神武) 천황의 동쪽 지방 정벌(東征) 당시, 금색 소리개가 비상해 천황의 활궁 끝에 멈춰 천황군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신화에서 연유하며, 1890년에 제정되었다.
14) 『도쿄니치니치신문』 1923년10월19일; 야마다, 2008, 110.
15) 関東大震災六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実行委員会, 61.

기 상황을 틈탄 반정부·반제국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경찰서에 조선인들의 습격과 폭동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전보와 안내문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타거나 부서지지 않은 인쇄시설 등을 이용해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었고, 동시에 경찰, 군, 관공서, 그리고 이동하는 피난민 사이에서 말과 글을 통해 확산됐다. 이후 일본 민간인들은 군대, 경찰과 함께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으로 보이는 이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강대흥도 대지진이라는 재해를 겪고나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생각한 순간, 가타야나기 지역에 이르른 3일 자정을 넘어섰을 때 정부의 지시로 바로 전날 자경단을 조직했던 지역민들의 분풀이와 학살의 대상이 되어 창과 칼로 큰 부상을 입고 아침 9시경에는 급기야 사망하고 말았다.[16)]

일본 공권력이 총동원된 정보 및 이동 통제에도 불구하고, 재해 후 3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재해의 화를 한인에게 전가해 동포를 참살하고 1만 5천명에 달한다고 보고된 수용소 감금 한인들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외교담당 조소앙의 명의로 일본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수용 한인을 석방하고, 한인 생사자에 대해 조사 공포하고, 학살 희생자에 대해 책임질 것을 묻는 내용이었다.[17)] 지진과 학살의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임시정부는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통해 그해 10월 13일자(165호) 1면에 이미 학살자 수는 6,000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했고, 12월 5일자 1면에는 “재일동포 피학살 진상조사회”의 조사 결과인 “본사 피학살 교일(僑日)동포 특파 조사원 제1신”을 실었다. 아수라장이 된 간토지역에서 시체 썩는 냄새와 살기 가득한 조선인 학살 피해지를 찾아다니며 동포 학살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일은 일본어에 능숙했던 유학생 출신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지진과 학살에서 살아남은 후 “재일본관동지방 이재조선동포위문반”을 꾸려 피땀어린 조사를 행했고, 이에 힘입어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사장 김승학에게 11월 중순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강대흥 피살 사건이 일어났던 사이타마에서의 학살을 포함한 10월말까지의 1차 조사결과 및 1923년 11월 중순까지 추가 집계된 수를 더하여 적어도 6,661명이 학살되었음을 보도했다.

당시 간토 지역 내 한인 인구와 이후 보호 명목으로 수용된 인원,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간 인원 등을 차감한 수 중 1/4만 학살당한 것으로 계산해도 6,000명을 웃도는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연유로 관련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해당지역의 인구통계 등을 감안할 때 『독립신문』에 발표

16) 사이타마현 우라와 지방재판소 가타야나기 사건의 피고 자경단에 대한 재판의 기록 (1923.11).

17) 독립신문』 No. 164,1923년 9월 19일. 『독립신문』의 기사를 통해본 간토대학살에 대해서는 장세윤,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림』 46, 2013 참조.

되었던 적어도 6,000명이라는 피해자 수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증언이나 신문 보도의 내용에 비해 실제로 피살자의 사체가 확인된 경우는 3,000을 넘지 못한다. 지진 학살 당시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재일본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YMCA)의 총무를 맡고 있던 중 학살의 위협을 넘기고 도쿄의 경찰서에 유치되었다가 동포의 피해자 조사에 착수했던 최승만 씨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피학살진상조사회"의 결성 자체를 허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살 사실과 사체 유골을 태우거나 이장하며 감추기에 급급했다. 때문에 도쿄 조선유학생 학우회, 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 재일천도교청년회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이들 한인 진상규명 단체는 이름조차 정부의 방해로 '위문반'으로 고쳐야 했다.[18] 최승만을 비롯해, 변희용, 한현상, 박사직, 민석현, 이철, 이근무 등 당시 조사에 직접 나섰던 한인들이 위험을 무릅쓴 학살 진상 조사 과정에서 경험했던 충격과 위험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리라. 도쿄 가메이도의 학살 등과 같이 관헌 주도의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진 경우, 사체를 한꺼번에 모아 태우고 강둑에 암매장하는 등 조직적으로 학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 수는 오늘날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증언을 포함한 위문반의 현장 답사 결과 3,000구 정도의 피살 한인 유해가 조사됐고,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학살 당시 희생자의 이름, 나이, 고향 등을 포함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기록된 바 있다.[19] 그들은 발로 뛰며 사체를 찾아다니면서 관헌에 항의했고, 이후 극심한 경찰의 탄압 가운데 이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20] 또한 조사에 참여한 한인들을 비롯한 경험자들에 의한 학살의 관찰과 경험을 소중한 회고록으로 남기기도 했다.[21] 그러나 아쉽게도 위문반의 활동은 12월 25일자로 해산당하고 말았고,[22] 위문반 조사 등으로 파악이 가능했던 학살 직후의 1차 조사 보고는 삼엄한 검열, "불온문서" 압수, 저자 체포 등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피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

다행히도 지난 2013년 여름 주일한국대사관 건물 이전을 기해 발견된 "일본진재시 피살자명부"(日本震災時 被殺者 名簿, 109매, 290명 수록), "삼일운동시 피살자명부"(三一運動時 被殺者 名簿, 217매, 630명 수록), 그리고 "일정시 피징용자 명부"(日政時 被徵用者 名簿, 65권, 18,322매, 229,482명 수록)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이 중 "일본진재시 피살자명부"와 "삼일운동시 피살자명부"에는 약 300명 정도의 학살 희생

18) 최승만, 「일본 관동 진재 시 우리 동포의 수난」『극웅필경 최승만 문집』, 김진영, 1970, 50.

19) 남아있는 한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신상 정보는 산재된 경향이 있으나, 학살 실태 조사에 참여했던 재일 청년들의 회고록과 일본외무성 및 총독부 문서 중 소위 "불령선인"과 관련한 치안 보고, 그 외, 김건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로 집필 배포된 김형규의 『학살』이라는 "불온문서" 책자나 당시 한국과 일본의 신문, 또한 도쿄의 한인 유학생들과 교류했던 요시노 사쿠조의 기록 등을 통해 학살의 실태에 대한 대강과 희생자 조사 결과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들 남아있는 기록은 학살지와 피살자 수가 중심으로, 수천에 이르는 피살자의 신상정보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문서 자료는 찾기 어렵다.

20) 일본 정부의 검열과 집회 금지의 망을 피하고자 때로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내용과 형태를 띠며 마련된 한인에 의한 추도회에 대한 소개는 이진희, 「관동대지진을 추도함: 일본제국의 '불령선인'(不逞鮮人)과 추도의 정치학」,『아세아연구』51:1 (2008), 53-96참조. 일본 내 진재 추도의 예와 수도 부흥 및 재건으로 학살 기억을 함몰해 가는 추도시설 소개와 관련해서는 李眞姬, 200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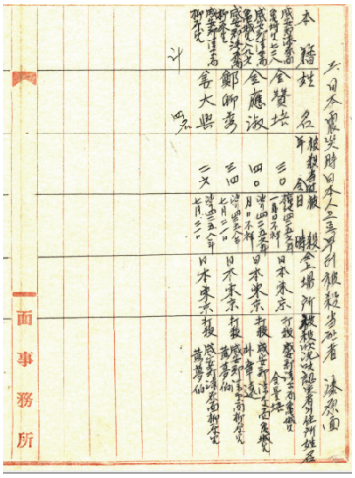
21) 한글, 일문, 중문, 영문 등으로 기록된 현존 간토대학살의 체험 기록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최승만의 전게서(1970)와 「동경 YMCA 봉직할 때」(『나의 회고록』 인하대학교출판부, 1985, 113-163), 또한 함석헌의 「내가 겪은 關東大地震」(『씨알의 소리』 26, 1973)와 『죽을 때까지 한걸음으로』(1996) 등이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통해 학살의 실상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산재된 한인들에 의한 기록들이 있다. 이제껏 일본의 식민 문서관이나 각 지역 내 발굴 자사료에 의해 큰 연구의 진척이 있었던 만큼, 한인 자신들이 경험한 바에 따른 사건 기록을 제국의 맥락 안에서 발굴, 분석, 활용하는 탈식민적 학살 실태의 연구는 시급한 당면 과제라 하겠다.

22) 朴慶植, 『在日朝鮮人関係史料集成』 第一巻, 三一書房, 1975; 147.

자에 대한 전후 한국 정부에 의한 최초의 조사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널리 알려진 6000명을 넘는 학살 희생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관동대지진 때 희생된 한국인의 명단이 이렇게 공식적인 정부 기록의 형태를 통해 알려지기는 처음이다. 국가기록원 소장의 이 3종 명부는 1953년 1월 9일 접수된 정부 기록으로, 1952년 12월 15일 109회 국무회의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일회담 준비 등을 염두에 두고 일제에 의한 한국의 인적 물적 손실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히 삼일운동, 간토대학살, 그리고 강제 징용에 의한 피해자 조사가 정부 행정망을 통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23] 현재 명부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검증·분석 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2차에 걸친 명부 확인 결과, 2015년 5월 현재 분석 대상은 286명이며, 이 중 명부 외 확인된 7명을 포함하면 제적 등본과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총 보고된 인원의 일부인 31명에 대한 간토학살 피살자로서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이다.[24] 이는 미미하긴 하나, 명부 작성 당시가 전국적 행정망이 제구실을 하기 어려운 전쟁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시정부로 시작된 한국 정부의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노력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총체적 학살 사태를 파악하는데는 불충분하고 정확도를 가늠하는데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학살 피해자의 이름, 나이, 출신지, 일본 내 학살지 및 학살 방법, 또한 피살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인정자"까지 기입된 매우 소중한 정부 기록이다. 특히 함께 발견된 3종 모두의 "명부"에 간토학살의 피해자로 보이는 기록이 혼재된 상태여서 피살 실태의 진상 규명과 유족을 찾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값진 자료이다.


獨立新聞
一萬의犧牲者

독립신문 No. 167, 1923년12월5일자 1면


面事務所

2013년 발견된 피살자 명부에 보이는 강대흥

23) 김도형, 「관동대지진 희생자 명부의 내용 검토와 역사적 성격」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청암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 재일코리안 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문제 연구> 발표문, 2014.

24) 오일환, "한국의 일제강제동원 관련 자료 현황 및 연구 방향," 일제침탈사 국제공동연구 워크샵 (동북아역사재단, 2014. 7. 29), 201-20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방문 인터뷰, 2015.6.2.

고향도 육친도 알 수 없던 사이타마 자경단 학살의 피해자 강대흥씨도 바로 이 “삼일운동시 피살자명부”에 같은 한자이름, 같은 나이로 보고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2013년 말부터 일반 공개하고 있는 이 명부에 따르면, 그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가 고향으로, 1953년 초 피해신고 완료 당시 같은 고향의 황몽백 씨에 의해 간토학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역시 같은 고향 출신인 또 다른 피살자도 유족에 의해 간토지역에서 진재를 즈음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강대흥의 학살 시기에 대한 이 기록의 내용은 부정확해 보인다. 하지만, 또다른 정부의 일제에 의한 피해 신고 문서 (2005년 접수)를 통해 한자를 포함한 이름, 나이, 고향의 주소까지 일치하는 동일인물로 보이는 기록을 대조 확인한 결과, 강대흥은 1898년 10월생으로, 유족에 따르면 1922년 일본으로 간 뒤 행방불명되었고, 강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고향인 경남 함안에는 유골대신 초혼장을 넣은 가묘를 만들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결국, 야마다 선생의 짐작대로 학살 후 92년이 지나서도 강대흥의 죽음은 고향의 육친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그 일본인 역사가가 가슴에 새겨 헤아려보고자 했던 조선인 피살자의 사망 장소나 경위 또는 고향에 계신 강대흥씨 육친의 돌아올 줄 모르는 24세의 식민지 출신 청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은 “행방불명”상태로 기다리다 시신도 없는 가묘를 한국에 만들어두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강의 묘 앞에 섰던 야마다 선생의 부끄러움의 열배 백배 천배의 송구함이 그의 사후 92년이 되어 나타난 강대흥의 신원을 밝혀주는 오래된 한국 정부의 기록물들을 마주한 내게 치밀었다. 일본 학살지에 마련된 “조선인 강대흥 묘”와 한국의 유족들에 의해 빈 채로 준비되어 있는 또 하나의 강대흥의 묘를 위해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 더 늦기 전에 무엇을 해야만 할까.

Ⅳ. 두개의 묘가 있기까지

아래 자료편에는 강대흥 씨의 학살과 두개의 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1923년 9월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간토대학살 사건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몇가지 1차 사료를 대략 소개하기로 하자.

1. 9월 2일 밤 내무성이 사이타마현 내무부장 고사카 마사야스 (香坂昌康)를 통해 전달한 이첩문 (사이타마현 각 지방 자경단 결성 명령)[25)]

大正十二年九月二日 郡町村長宛 埼玉県内務部長 不逞鮮人暴動に関する件移牒 今回の震災に対し、東京に於て不逞鮮人の盲動有之、又其間　過激思想を有する徒らに和し、以って彼等の目的を達せんとする…　在郷軍人分会消防隊青年団等と一致協力して、其の警戒に任じ、一朝有事の場合には、速かに適当の方策を講ずる様至急相当御手配相成度、右其筋の来牒により、此段及移牒候也	다이쇼 12년 9월 2일 사이타마 현 내무부장으로부터 각 지방행정장에게 불령선인 폭동에 관한 건이첩 이번 지진 재해를 맞아, 도쿄에 불령선인의 망동이 있고 또 그들이 과격사상을 가진 무리들과 부합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재향군인분회, 소방대, 청년단 등과 일치 협력하여 그 경계에 임하고, 유사시에는 속히 적당한 방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충분한 준비를 갖출 것. 이상 상부의 통첩에 의해 이를 전달하여 이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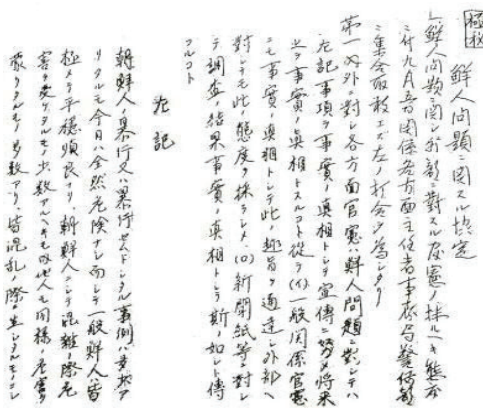
2. 9월 3일 후나바시 해군 무선전신 송신소장 오모리 료조(大森良三)가 각 지방장관 앞으로 타전한 전보 (관헌에 의한 유언비어 유포)[26)]

呉鎮副官宛打電 9月3日午前8時15分了解 各地方長官宛 内務省警保局長出 東京附近の震災を利用し、朝鮮人は各地に放火し不逞の目的を遂行せんとし、現に東京市内に於て爆弾を所持し石油を注ぎて放火するものあり既に東京府下には、一部戒厳令を施行したるが故に、各地に於て充分周密なる視察を加へ、鮮人の行動に対しては厳密なる取締を加へられたし	구레(呉)진 부관 앞 타전 9월 3일 오전 8시 15분 타전 완료 내무성 경보국장 발송 각 지방장관 앞 도쿄 부근의 지진 재해를 이용해 조선인은 각지에서 방화하고 불령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현재 도쿄시내에서는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고 불 지르는 자 있어, 도쿄부에 속한　일부 지역에는 이미 계엄령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각지에서는 주도면밀히 시찰하여 선인(鮮人)의 행동에 대하여서는 엄밀히 단속할 것.

3. 9월 5일 임시 진재 구호 사무국 경비부에서의 정부 관리들 (육군, 해군, 내무성, 도쿄경시청, 계엄사령부의 각 최고 지도자들)의 회합 (학살 사실의 왜곡, 은폐, 조작 및 희생자의 명예훼손) [27)]

- 조선인의 폭행이나 폭행하려고 했던 사건은 다소 있었지만, 현재는 더이상 그러한 위험성 없음"이라고 발표할 것
- "조선인 폭행 또는 폭행하려 했던 사실을 적극 수사해, 가능한 한 긍정하도록 힘쓸 것"
- "풍설을 적극 조사해, 이를 가능한 한 사실로 긍정할 것"
- "해외 선전에 있어서는, 배후에서 특히 적화(赤化) 일본인 및 적화 선인이 폭행을 선동했다는 사실을 선전하는데 힘쓸 것"

25) 요시노 사쿠조 (吉野作造), 『圧迫と虐殺』(東京大学明治新聞雑誌文庫所蔵吉野文庫), 1924, 96; 『東京日日新聞』1923.10.18.(석간).필자 번역
26) 강덕상, 금병동, 1963, p.18.(필자 번역)
27) 강덕상, 금병동, pp.79-80.



"극비 선인 문제와 관련한 협정" (「極秘鮮人問題に関する協定」)

4. 일본 간토 지역의 어린이들 증언 (공권력에 의한 유언비어 유포, 자경단 학살 당시의 정황, "불령선인"에 대한 공포와 미움의 세대간 전이)



요코가와 보통소학교과 고토부키 소학교 어린이들의 진재 기억

5. 두루마리 그림으로 표현한 도쿄 신쥬쿠 부근 조선인 학살 광경 (순사, 재향군인, 자경단에 의한 학살)



萱原白洞 (1896–1951), 東都大震災過眼録, 1923–1924 (일본역사민속박물관 및 하쿠도家 소장)

갖은 제국의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학살과 군대 경찰 민중의 학살 증거는 공문서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작문, 검열을 피할 수 있었던 화가의 그림에까지 넘쳐난다. 9월 5일 당시 일본 최고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협의한 사항은 지진과 학살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귀국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도 곧 전달되었고, 식민지 지배의 효율성과 대외적인 일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시정 방침은 일관되게 추구되었다. 관련 보도 검열이 풀리던 10월 20일 다음날 9월 5일의 비밀협정에 따른 날조된 "조선인 범행"이 도쿄의 신문에 게재되지만, 140 "조선인 용의자"중 86퍼센트는 신원미상의 만들어진 범죄에 해당했고, 6명은 음식 등을 훔친 죄였다. 단 한명의 조선인이 폭발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받을 법했지만 그마저도 증거가 부족했다.[28)]

Ⅴ. 탈식민 · 탈냉전 시대의 역사인식과 제국의 폭력 청산을 위한 연대와 협력

9월 5일 야마모토 내각은 민중에게 고유(告諭) 내각 제2호를 발표해 "민중 스스로가 함부로 선인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은 본래 일선(日鮮) 동화의 근본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온 외국에 보도되어 결코 좋을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온한 조선인"은 군대, 경찰에게 인도할 것을 명했다. 즉 민중에 의한 린치(私刑)가 멈춰야하는 이유의 골자는 조선인 박해가 일본의 동화 정책에 장애가 되고,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게될 것이므로 이를 막겠다는 것이었다.[29)] 같은 논리로 당시의 조선인 학살 실태를 염려하던 이와테현의 한 지식인은 미국인 지인에게 편지를 띄웠다. 그는 완곡한 표현으로 지인이 신문 등을 통해 일본에서 일어난 야만적인 조선인 사냥에 대해 들었는지를 물으며, 이 사건이 유대인 박해나 아르메니아의 학살과 같이 기억될까 두렵고, 일본인은 본래 그렇게까지 야만스러운 인종이 아님을 거듭 완곡한 표현으로 강조했다. 또한 이런 실수는 "동포로 동화시키려던 양민마저도 독립의 의도를 깊고 강하게 새겨가게 될 것임에 틀림없고", 일본은 결국 국제적 고립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며 두려워하였다.[30)] 즉, 그 또한 정부와 동일한 논리, 즉 식민지 조선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제국 경영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해 정당화하고자 했던 일본의 국제적 평판에 누를 끼치게 됨을 두려워했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학살을 비판하고 있

28) 강덕상, 금병동, 420-432; 야마다, 2003, pp.91-96.
29) 30)강덕상, 금병동, p.74.
30) 『和賀新聞』, 1923.9.9;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全国各地の流言と朝鮮人虐待』, 東京 : 創史社), 2014, pp.45-48.

었던 것이다.

의병과 같은 식민통치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한인에 대해 “불령선인”으로 비인격화시켜 제국 내 경멸과 공포심을 조장해왔던 일본 정부는 관동지진을 호기로 효과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고 군대와 경찰이 한인학살을 주도했다. 그 후 학살에 대한 책임을 자경단에게 전가시켰고 1923년 11월부터는 정치외교적 선전용으로 기만적인 자경단 재판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강대홍씨 살해를 주도한 자경단원 중 범죄 사실을 어찌해도 피할 수 없었던 다섯명은 사이타마현 가타야나기 사건 재판 기록에 적혀져 있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신상정보는 물론 피살자 강대홍의 이름까지 모두 먹칠된 채 공개된 이 재판 기록에 따르면, 주동자 다섯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인류가 추구해온 생명의 존엄, 인권의 보호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준을 둔 비판보다는 제국의 논리와 효율성에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한 당대 일본제국의 지도자, 지식인, 일반 시민들의 학살에 대한 처리 방식과 반응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후 냉전 기간 동안 경제협조, 신뢰회복, 일본의 명예로운 지위 유지라는 목표를 제일로 삼아 인근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교회복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한 제반 처리 방식과 공통된 기조를 떠올리게 한다. 1923년 당시 학살 사실을 은폐하는 대신, 혼란과 우려 속에 저지른 정부 시책의 과오를 바로 인정해 사실과 과오를 알리고 성찰하는데 노력을 쏟았더라면 그 후 전간기의 일본 역사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후 일본의 근린제국조항과 항구평화조사회 설치법안이 일본의 국제적 명예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에 기반한 진정한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에 대한 자성적 성찰의 결과였다면 한일관계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의 신뢰 관계는 지금쯤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학살의 목격자로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당시 고이즈미 수상앞으로 권고문을 발송케한 재일코리안 문무선 씨는 간토대학살이 집단학살로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임을 명시할 것, 일본에서 일어난 외국인 학살이므로 국제법에 의한 집단 학살 행위로 책임질 것, 그러한 집단 학살의 가해 책임자를 국내법으로 처벌 안했던 일본 정부의 책임을 밝힐 것,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가는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서, 일본의 조선인과 외국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1923년 12월15일 일본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나

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 1881-1944)는 9월 3일 후나바시해군 무선전신 송신소에서 타전한 내무성 경보국장의 전보 등 당국이 유언비어를 퍼뜨렸음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이며, 한인 학살 사건의 전면적 책임이 오로지 자경단에게만 있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 만들어 낸 이 유언비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정부는 그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 불행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총리대신 야마모토 (山本権兵衛, 1852-1933)는 나가이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핵심을 피하면서 마지못해 "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 그 내역에 대해 본 회의장에서 보고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그 때가 되면 알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세기를 넘긴 오늘날에도 일본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31)]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관헌의 공식 루트를 통한 유언비어 유포, 민중에 의한 학살 유도, 군대와 경찰을 통한 학살 주도 외에 사체유기, 사실 은폐, 날조된 조선인 폭동 조사 등 셀 수 없이 많다. 어쩌면 이미 인정하고 뉘우치기에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결국 1923년 간토대학살은 공권력하에 자행된 명백한 증거를 동반한 군관민의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국과 신민에 의해 은폐 왜곡되었다. 부인할 수 없이 드러나버린 증거에 대해서는 자경단이나 "일부 불령선인"을 희생양으로 잡아 학살의 책임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살의 진상을 드러내는 증거는 소멸되지 않았고 제국의 거미줄과 같은 정보 통제망을 뚫고 제국의 각지로, 세계 각국으로 전달되었다.[32)] 학살 뒤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하고 요구하는 움직임 또한 제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각종 조사 활동과 위문반, 추도회 등의 형태로 지속되어 왔고,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꼈던 일본의 지역 공동체에서는 이미 서너세대를 건너가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9월의 학살을 기억하며 오늘날까지도 추모하고 있다. 학살의 배경이 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 일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면면히 이어졌다. 어떻게 보면 강대흥의 생명을 앗아간 일본도,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되찾고서도 미군정과 냉전의 영향하에 과거 검증과 식민지 폭력의 원인,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신뢰 관계에로의 다짐이 결여된 상태로 임시방편적인 국교를 맺어 유지해오

31) 『관보호외(官報号外)』 1923년 12월 16일, 105-107, 111; 야마다, 2008, 20 재인용.

32)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벌어진 간토대학살의 실태를 알리려는 한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홍선표,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구미 한인세력의 대응」『동북아역사논총』 43, 2014 참조.

는 동안, 학살 희생자들의 무덤과 사체와 유족들의 억울함은 방치해두기만 했던 한국도 냉전과 식민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작은 규모지만 일본에서는 주로 학살을 목격했던 일반시민들에 의해 주도되어 간간이 이어져 오는 학살피해자 추모행사가 있다. 최근 전후에도 청산은커녕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간토대학살과 관련해 오랜기간 연구해온 원로 및 소장학자들과 이러한 일본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인 학살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해온 시민 단체인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회"는 2차 서명운동을 벌여 일본 정부에 92년전 얻지못한 "목하 조사 중"이라던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이렇게 간토대학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의 노력은 경기 침체, 역사수정주의, 정·재계 인사들의 "공공의 적" 만들기 게임 가운데 급격히 우경화한 결과 재일 동포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진행 중이다. 이런 일본의 연구자나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한국도 이제부터라도 더더욱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데 앞장서고 연대해갈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냉전구도의 정점 시기에 북한이 조총련을 매개로 일본 내 한인 동포에 대해 종전 직후부터 각종 지원 사업을 벌여 북송 "귀국" 운동까지 펼쳤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다. 이는 재일동포 관련 연구지원에 소극적이게 했을 뿐 아니라, 반공 협력국이어야 하는 일본에 대해 제국기의 식민 폭력에 대한 "과거 청산"을 촉구하는데 역부족이었거나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간토대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연구는 일본의 재일사학자와 양심적인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교에서 근무했던 고 금병동 선생을 비롯해, 재일 사학자인 강덕상 선생, 그리고 실천하는 지식인 야다마 쇼지 선생 등이 그들이다. 또한 수십년간 축적된 일본내 진상규명 노력을 이어가고자 센슈대학의 다나카 마사타카 교수를 비롯하여 사이타마, 치바를 비롯한 간토 각 지역의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은 일본 내 간토학살에 대한 기억과 증거를 지우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과 맞서며 오늘날까지도 각종 자료를 수집 출판하고, 학습회, 연구회, 추도회, 학살 증언 관련 영상물 상영회 등을 감당해왔다. 비록 근년에는 일본 내 우경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일본교과서에서 '학살'이라는 단어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해설을 삽입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이 사건을 역사 교과서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의 조국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앞섰다.

다행스러운 것은 임시정부와 한인 유학생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밝혀진 진상의 일부에 살을 붙이듯, 수만의 지진 학살의 위기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고국으로 살아돌아온 한인들, 그리고 적어도 칠천을 넘는 지진 직후 강제 수용 감금당한 한인들의 회고록과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이, 또 그들의 실태를 알리고자했던 해외 홍보의 노력에 힘입어 9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새 사료들이 발굴되고 있다는 점이다. 면면히 이어온 일본 내 역사교육자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주도로 진행된 학살 피해자 유골 발굴과 목격자 청취조사 등도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로는 간헐적이긴 하지만 시민단체 문화예술활동 단체간의 교류도 있어왔다. 한국의 경우 학술연구에 있어서는 일본제국의 폭력상이 부인되고 왜곡되면 될수록 더 큰 자극을 받아 성장해가는 측면도 보이고, 서서히 한국 내에서도 진상규명과 이 사건의 역사적 자리매김을 향한 연구와 시민 단체의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간토대학살 80주년(2003년)과 90주년(2013년)을 계기로 한국, 일본, 재일 코리안, 구미까지도 관련 교류가 늘어나면서 한일 양국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향한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재일의 연대에 기초한 시민운동과 국경을 넘어선 정보 교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33] 2013년의 명부 발견은 북한에 적을 둔 피살자들의 신원확인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요구하고 있고, 2014년 4월 7일 한국의 여야 10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동조선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은 묵혀둘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정부 주도/보조의 조사기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제까지 쌓아올린 진상규명과 학술연구 및 유족찾기의 노력은 한일 학자와 시민단체 간의 연대와 교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축적된 결과를 한일 양 정부의 적극적 주체적 정보공개와 진상 규명과 유족 관련 조사에의 협조로 한걸음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간토대학살을 비롯한 근대 식민주의의 이기가 낳고 냉전주의 세계질서가 묻어 침묵하게 만든 여전히 충분히 연구되어오지 않았던 수많은 세계근현대사의 식민지 대량학살사건은 탈식민 탈냉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시하고 "청산"해야 할 이 시대 인류 공통의 과제이다. 어쩌면 한국과 일본은, 간토대학살의 과거사 처리 경험을 통해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한국 대 일본의 과거사 대결 구도를 넘어서 탈식민 탈냉전 시대의 성숙한 역사인식과 인도주의에 기반한 식민폭력 잔재에 대한 인도주의적 "청산과정"의 한

33)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国家責任を問う会와 1923関東韓日在日市民連帯의 활발한 시민 활동과 성과는 오늘과 내일의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운동을 위해 새로운 힘과 전망을 보이는 좋은 예이다.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본의 근대식민지배에 관한 관찰과 실험과 연구는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뿌리깊고 방대하다. 이러한 일본제국의 과오의 경험까지도 십분 살려, 한국 중국과 더불어 근대식민주의의 형성, 심화, 패퇴 및 청산 과정에 대한 성찰적 역사의 주체로서 도덕적 주도권을 쥐고 인류의 정의와 평화의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롤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경화와 제국주의의 과오를 부인함으로써 커져만 가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국내외의 에너지를, 건설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오랜 기간 유지 가능한 연대와 각자의 자부심을 위해, 그리고 인류보편의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시켜가는데 전환하여 쓸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의미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인류 보편의 기본 인권과 인간 존엄의 도덕적 가치를 지켜냄으로써 긴 안목으로 내다보는 평화를 위해 끊임없는 자성과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탈냉전 탈식민시대의 주체적 역사관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오충공 감독의 간토대학살 기록영화 『숨겨진 손톱자국』(隠された爪跡) 상영회 (미국 UCLA, 2014)

* 이 글은 2015년 6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과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에서 발표한 "한일협정체제와 남겨진 과제"의 발제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2015년 한국학 중진학자 펠로십을 통해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해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사의를 표한다.
** 이 글은 위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이나 「동북아역사문제」 발간지연으로 5월호에 게재합니다. 독자의 양해를 구합니다.(편집자)

인용문헌

강덕상 (姜德相), 금병동 (·琴秉洞) 編·解說, 『現代史資料 6 関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

関東大震災六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実行委員会編刊, 『かくされていた歴史—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増補保存版, 1987.

김산 (Kim San) and Nym Wales. Song of Ariran: a Korean Communist in the Chinese Revolution. San Francisco: Ramparts, 1973.

김의경,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985), 『김의경 희곡선 2 길 떠나는 가족』 서울: 현대미학사, 1998.

박경식 (朴慶植), 『在日朝鮮人関係史料集成』 第一巻, 東京 : 三一書房, 1975.

변희용, 「관동진재와 조선인 학살사건」 (1923.12.30) 『일파 변희용 선생 유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7.

사이드, 에드워드 (Edward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1993.

야마다 쇼지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全国各地の流言と朝鮮人虐待』 東京 : 創史社, 2014.

------. 이진희 역,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서울: 논형, 2008.

이방자 (Yi Pangja), The World Is One, 1973.

이방자, 『지나온 歲月』, 서울: 남형출판사, 1980 (초판 1974).

이진희, 『간토대학살: 일본의 제국 경영과 식민지 대량 학살의 어제와 오늘』 (출간예정, 2016).

------. " 'Malcontent Koreans (Futei Senjin)' : Towards a Genealogy of Colonial Representation of Koreans in the Japanese Empire." Studies on Asia IV 3:1 (2013), 117-187.

------. Jinhee Lee, "The Enemy Within: Earthquake, Rumors, and Massacre in the Japanese Empire." In Tobe Levin, ed. Violence: Mercurial Gestalt (At the Interface/Probing the Boundaries Series).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2008, 187-211.

------.「관동대지진을 추도함: 일본 제국의 '불령선인' (不逞鮮人)과 추도의 정치학」『아세아연구』 51:1 (2008), 53-96.

------. Jinhee Lee, The Massacre of Koreans through Paintings (The Great Kanto Earthquake 8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Booklet), Tokyo: Koryŏ Museum, 2003.

------.「人権を考える窓口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の歴史と空間」『Sai』 48 (September 2003), 12-16.

최승만, 「동경 YMCA 봉직할 때」, 『나의 회고록』, 113-163,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1985.

최승만, 「일본 관동 진재 시 우리 동포의 수난」, 『극웅필경 최승만 문집』, 37-184, 서울: 김진영, 1970.

하타노 스미오 (波多野澄夫), 国家と歴史, 東京: 中公新書, 2011

함석헌, 『죽을 때까지 한걸음으로』, 서울: 한길사, 1996.

------. 「내가 겪은 關東大地震」, 『씨알의 소리』 26, 1973.

2015년 5월호(통권 98호)

동북아역사문제
-주요 현안 분석-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12층
전화 02-2012-6042
팩스 02-2012-6177
ISSN 2383-6342

☞ 「동북아역사문제」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09
9 772383 634004
ISSN 2383-6342